“이러려고 사찰음식 전문위원 됐나”… 사임 강요 논란

불교문화사업단, 예고 없이 일방적 전화통보
“대중화 앞장선 스님들 내몰아선 안 돼” 비판

사찰음식 대중화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전문위원 스님들이 위촉 1년 만에 사업단으로부터 일방적 사임을 강요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사업단장 교체 이후 전문위원과의 회동이 한 차례도 없던 데다가 사임 요청 사유도 당사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사찰음식 전문위원은 교육 체계에 대한 자문과 레시피 정리, 교재 편찬 등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 현 전문위원들이 사찰음식문화 보급과 관련해 오랜 기간 두드러진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사찰음식 대중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위촉 1년 만에 사임 요청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사업단 측은 12월 6일 현 사찰음식 전문위원 스님 5인 전원에게 12월 20일까지 사표 제출을 전화로 요청했다. 이는 사업국장 원경 스님이 전문위원 스님들에게 직접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위원들에게 확인결과 해당 스님 모두 사임 요청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으며, 대부분 스님들은 “의욕과 사기가 꺾인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문위원 A스님은 “전문위원을 전임 단장이 위촉했기 때문에 현 단장인 성효 스님이 새로 임명하겠다는 것이 의중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하지만 새로 임명할 때 (현 위원 중) 누가 포함되고 빠질지는 모른다고 해서 당혹스러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A스님은 “성효 스님은 올 초 단장 취임 후 전문위원들과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명확한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고 실무자를 시켜서 어떻게 사표를 내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해당 전문위원 스님들 대부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위원을 현 단장 명의로 재위촉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이고, 일언반구 없이 위원을 교체한다면 밀실 행정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충분히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A스님은 “직원들도 현재 사표를 낸 채 업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들도 함께 사표를 내라는데 도대체 어떤 논리와 근거로 이해해야될 지 모르겠다. 그동안 사찰음식 보급을 위해 동분서주한 노력이 헛수고가 된 기분”이라고 비통한 속내를 내비쳤다.

“필요할땐 임기 2년?” VS “규정 없어”

사찰음식 전문위원은 지난해 11월 前 사업단장 진화 스님이 사찰음식문화 발전을 위해 교재편찬위원으로 참여한 스님과 재가자를 위촉, 자문단 형식의 체계적 운영을 꾀한 것이다. 현 전문위원을 시작으로 후학을 양성해 2기, 3기로 확대해나갈 계획이었다.

전문위원 스님들은 이런 자신들의 임기를 2년으로 알고 있었다고 본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스님들의 증언대로라면 위촉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난 셈이다.

이에 대해 사업단 측은 임기는 규정돼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내부서 (임기를) 2년 정도로 생각한 것이지 꼭 규정을 만들어서 제도화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업단 측 설명에 전문위원 스님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B스님은 “처음 위촉할 때는 종단이 필요로 한다면서 모시러 오더니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조계종단이 관심 갖기 전부터 사찰음식 대중화에 앞장선 스님들을 이런 식으로 내몰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위원을 위촉한 前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전화통화에서 “정확한 임기가 기억나진 않지만 규약이 있을 것이다. 정식 회의를 거쳐 통과시킨 것으로 안다”며 “당시 임기 없이 전문위원을 위촉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단, 조만간 공식 입장 발표

전문위원 스님들은 사표를 내라는 문화사업단 입장에 속앓이를 하지만 정작 실무자들은 이에 대한 배경을 잘 알지 못했다. 실제로 사업단 실무자에게 전문위원 스님 외에 재가전문위원도 사임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자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재가전문위원은 교수 등 4인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재가전문위원은 “사표를 내라는 사업단 연락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임 논란’에 대한 사업단 공식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실무자에게 연락했지만, 실무자 C씨는 “단장 스님 의중을 확인 못 했다. 현재로썬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조만간 내부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는 설명만 되풀이했다.

이에 단장 성효 스님의 정확한 해명을 듣고자 사업단 측에 공식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일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봉은문화센터 임대수익, 승려복지에 쓴다

조계종 11월 30일 결의
대표적 불교계 수익사업 활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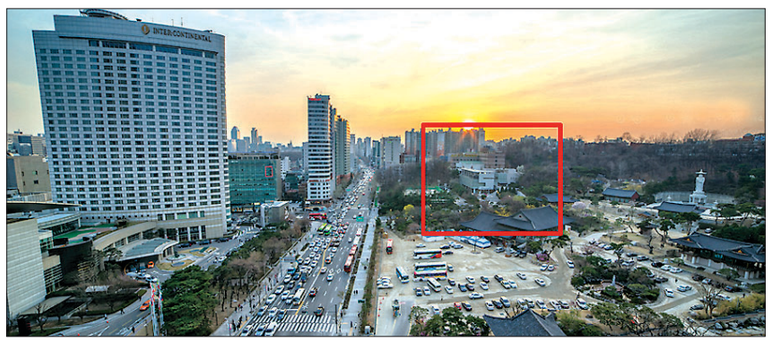
조계종이 서울 강남 봉은사 옆 봉은문화센터 임대수익을 승려복지에 쓰기로 했다. 이번 강남 봉은문화센터 임대수익의 승려복지 활용은 대표적인 불교계 수익사업 활용 선례로 평가된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11월 30일 종무회의에서 2016년 10억원에 이어 2017년부터 봉은사 봉은문화센터 임대료 중 매년 10억원 씩 3년간 30억원을 승려복지특별회계로 적립하기로 결의했다.

봉은문화센터는 지난해 말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강남 총무원’ 발언 당시 총무원 이전 후보지로 언론에 회자된 곳으로 지상4층, 지하3층 연면적 5,600여 평에 서울 강남 핵심부인 코엑스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봉은문화센터는 봉은사 토지에 대우건설이 총 306억원을 들여 2002년 완공한 건물로 10년간 운영권을 가진 뒤 이후 봉은사로 귀속하기로 한 건물이다. 하지만 투자비 회수 미비로 상호 감사 등을 거쳐 운영계약이 연장돼 2016년 6월 30일 봉은사로 완전 귀속됐다.

조계종은 그동안 이 건물의 임대수익의 활용에 대해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재무부에 따르면 봉은문화센터 건물은 웨딩홀 명목으로 보증금 70억원에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연 30억 원,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연 35억원의 임대계약이 맺어진 상태이다.


서울 강남 봉은사 일대 전경. 사진 붉은 네모 안이 봉은문화센터다.

2016년 6월 30일 봉은사로 귀속
웨딩홀 임대, 연간 30~35억 수익
매년 10억원 승려복지기금 활용

조계종 재무부 관계자는 “사찰 수익은 사찰 경상비에 쓰이지만 직영사찰인 만큼 승려복지란 승단 전체에 대한 기여란 판단이 종무회의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승려복지회계 적립 10억원과 종단 목적기금 적립 2억원이 사용되며 나머지는 사찰특별회계로 적립된다”고 설명했다. 사찰특별회계는 임대계약 종료 후 반납해야 할 보증금 70억원에 대한 부분으로 3년 추가 계약 만해도 69억원이 적립된다.

승려복지제도는 이번 봉은문화센터 임대수익 지원으로 재정 확보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승려복지제도는 그동안 수익사업과 스님과 불자, 사찰의 승보공양 후원 운동, 종단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 기금이 적립돼 왔다. 2011년 승려복지 최초 시행 당시 만65세 이상 무소득, 무소임자 스님들만을 대상을 의료비 지원 등을 해왔지만 2015년부터는 구족계를 받고 결계를 필한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수혜자가 대폭 확대됐다. 2015년에는 2014년도에 비해 지원 인원수는 8.2배, 지원금액은 5.7배 증가한 상황이었다.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제도가 자리잡으려면 이외에도 스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봉은문화센터 임대료 일부의 승려복지특별회계 적립이 계기가 돼 건강한 사부대중 공동체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현대차, 미르재단에 GBC인허가 대가 기부”

조계종 12월 5일 의혹 제기… 현대차 측 “서울시와의 별개 문제”

조계종이 현대차 GBC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현대차 그룹이 민원 해결 대가로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KD코퍼레이션 등 최순실 게이트 관련 회사에 총 201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12월 5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으로 “한전부지 매입관련 8000억원의 세제 혜택과 신사옥 건립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의 대가로 현대차 그룹이 재단법인 미르 등에 총 201억원을 헌납했다”며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조계종은 옛 봉은사 경내인 한전부지 내 현대자동차 신사옥 GBC 건립을 두고 105층, 553m에 달하는 초고층 건물에 대한 서울시 인허가가 불과 2년 내에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정부와 서울시 등에 의한 재벌 특혜이자 졸속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계종은 “정몽구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인허가 지연과 과도한 공공기여 부담 등을 애로사항으로 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현대자동차 그룹의 201억원 헌납이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는 대가였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6일 진행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진행 현대차 사장은 한전부지 인허가 관련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지역개발 기준 하에 입찰한 것으로, 모든 개발에 대한 결정은 서울시 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공개도 촉구한 상태다. 봉은사역사문화환경보존대책위 관계자는 “현대차는 서울시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 GBC건립과 관련된 많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재)선학원 고위직, 성추행 파문 확산

선학원 “불순세력 음해” 해명에 불교여성 · 시민단체 규탄 이어져

선학원 고위직 스님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두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불교계 일부 언론은 선학원 고위직 A스님이 12월 2일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음을 보도했다. A스님은 지난 8월 초 30대 여직원 B씨와 강원도 속초에 가 신체 일부를 만지고 숙박업소에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학원 측은 12월 5일 “보도 배후에는 선학원을 해치려는 불순세력이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엄정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사법 절차에 의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선학원 측의 해명에도 불교계 여성인권단체들은 같은 날인 5일 성명을 통해 A스님을 규탄했다. 불교여성개발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종교와젠더 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개인적 사건으로 치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폭력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학원 내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상임대표 법상, 이하 선미모)도 6일 성명을 내고 “해당 스님이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 사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범계 사실이 확인될 시 징계해야 한다. 한 스님의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재단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운영위원장 유지원, 이하 불시넷)도 12월 7일 성명서를 통해 당사자 스님이 직접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노덕현 · 박아름 기자

제4차 깨달음 무료공개강좌



깨달음 산문은?

기존의 각종 기도법 및 수행법과 불교의식을 일체 하지 않는 곳이며,
오직.....
80화엄경을 현대식 버전으로 재번역한 깨달음 경전으로
독경, 사경, 법경수행을 함과 동시 독창적인 진귀 수인수행법으로
고통 해탈의 문을 여는 수행 단체입니다.

업(業)과의 전쟁

▶ 일 시 : 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오후2시
▶ 장 소 : 깨달음 산문(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 문 의 : 1899-9532

깨달음 山門